

열린 충남

Vol. 107
2024
WINTER

권두언

충남의 미래를 여는 청년정책

특 집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추진현황과 과제
충청남도 고립·은둔 청년 발굴과 지원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충청남도 청년정책과 오늘의 나

현 안

중권역 목표기준 달성을 위한 당진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기초지자체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
충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활용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방안

Contents

2024 WINTER Vol. 107

권두언

- 04** **충남의 미래를 여는 청년정책**
남성연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특집

- 08**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추진현황과 과제**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충청남도 고립·은둔 청년 발굴과 지원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오정아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박춘섭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충청남도 청년정책과 오늘의 나**
김성준 독립서점 오늘안녕 대표

현안

- 24** **중권역 목표기준 달성을 위한 당진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최정호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기초지자체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
김용현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충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활용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방안**
김진영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열린마당

- 44** **쓰레기(일회용품) 없는 지역 축제 제안 활동
- 일회용품 사용 없는 지역축제 시민 의식조사 결과**
권은정 천안녹색소비자연대 팀장

언론이 바라본 충남

- 51** **충남 방문의 해는 도약을 위한 도움닫기일뿐**
한남희 디트뉴스24 충남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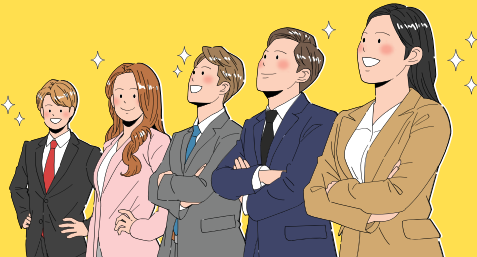
로컬이 답이다

- 54** **공학도에서 청년 농부가 되다!
스마트팜으로 부농의 꿈을 실현하는 영웅딸기**
김영웅 영웅딸기 대표

연구원 소식

- 58** **충남연구원,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안 모색
충남연구원, 2025년도 연구 아젠더 잡았다
충남·대전, 효율적 행정통합 추진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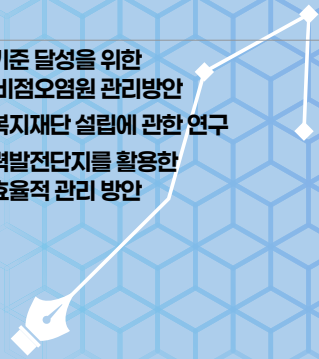
04 권두언 충남의 미래를 여는 청년정책



08 특집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추진현황과 과제 충청남도 고립·은둔 청년 발굴과 지원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충청남도 청년정책과 오늘의 나



24 현안 충권역 목표기준 달성을 위한 당진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기초지자체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 충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활용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방안



44 열린마당 쓰레기(일회용품) 없는 지역 축제 제안 활동 - 일회용품 사용 없는 지역축제 시민 인식조사 결과



51 언론이 바라본 충남 충남 방문의 해는 도약을 위한 도움닫기일뿐



54 로컬이 답이다 공학도에서 청년 농부가 되다! 스마트팜으로 부농의 꿈을 실현하는 영웅딸기



충남의 미래를 여는 청년정책



남성연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2025년, 충남은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와 함께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청년들은 더 이상 단순한 미래 세대가 아닌, 오늘을 만들어가는 핵심 주체입니다. 충남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충남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해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등 총 123개 정책을 마련 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청년 친화적인 도시 : 미래를 설계하는 기반

미래도시는 청년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담아내는 활력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충남은 청년이 머물고, 일하고, 즐길 수 있는 ‘청년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꿈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시 전반에 걸쳐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서동 대학로 보행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청년들의 문화적 자율성과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할 것입니다.

창업과 일자리 : 지역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

창업과 일자리는 청년정책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충남의 창업·일자리 정책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말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청년인턴 사업, 특화기업 청년매칭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경험 및 취업 지원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또한 창업교육, 컨설팅, 멘토링, 창업공간 제공 등 창업지원제도를 확대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반도체, 미래차, 디스플레이, 배터리, 수소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와 연계된 창업정책은 지역 청년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디지털 경제의 중심에서 창업의 꿈을 키우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청년 창업자들이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주거와 복지 : 청년의 안정을 보장하는 정책

주거 안정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꿈을 펼치기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청년들은 사회 진출 초기 단계에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남은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 사업인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추진 등 청년들에게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사업을 전면 개편하여 청년들이 이자 부담은 지금보다 줄이고 지원 대상은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충남은 청년들이 삶의 안정을 찾는 것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입니다. 내년부터는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담 및 적응·복귀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혁신 : 풍요롭고, 창의적 역량을 발휘하는 기회

청년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도전적, 혁신적, 창의적이며 문화적 역량과 욕구가 높습니다. 충남은 청년들이 문화적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문화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청년들이 자신만의 색깔을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우선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와 연계된 다양한 문화행사들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전국 청년축제 '피크타임 페스티벌'은 청년들이 끼와 재능을 펼치는 계기를 마련하고, '충청유교문화권 관광 진흥 사업' 등 지역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문화 프로젝트들은 청년들이 문화적 자산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장(場)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충남은 청년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청년정책의 필요성 :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청년은 곧 지역의 미래입니다. 청년의 꿈을 지원하는 것은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를 일구겠다는 것입니다. 충남은 2025년 청년정책을 통해 지역과 청년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년간담회 등을 통해 직·간접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청년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의 핵심은 단기적인 성과 창출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충남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개개인의 성공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충남이 함께하겠습니다.





특 집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추진현황과 과제
충청남도 고립·은둔 청년 발굴과 지원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충청남도 청년정책과 오늘의 나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추진현황과 과제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년정책은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총괄·조정기구와 사무국, 중정부에 행정부서가 설치되는 등 정책추진 체계가 구축되어 왔다(김기현, 2020: 73). 물론 2015년 이후 서울시를 출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해 먼저 청년정책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청년정책의 출발점을 2020년이 아닌 2015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국가정책 차원에서 법률 제정은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청년정책의 출발점으로 청년기본법 제정 시점을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2024년 현재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보면, 35개 중앙행정기관이 청년기본법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중앙정부의 청년정책과제는 총 356개에 이르고 있으며 예산은 27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4: 9). 2020년 청년기본법이 수립되었던 해에 청년정책 사업은 182개였고 예산은 22조 원으로 4년 동안 청년정책이 사업 수와 예산 규모에 있어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 1.).

여기에서는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정책 추진 방향의 주된 경향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독자적으로 행정부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사업을 확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에 주목하여 정책 추진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총괄·조정기구와 사무국의 역할을 담당하는 청년정책 주관부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이 글에서는 주관부서에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현황, 그리고 청년정책과제와 예산 등에 대해서 다루었다.

1.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추진현황

우선 청년정책의 총괄·조정기구인 청년기본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청조위)이다. 법률에는 청조위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다. 청조위의 역할은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청년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청조위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임한다. 위원은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으로 구성된 공공 부문과 청년정책 전문가와 청년단체의 대표 등 민간 부문으로 40명 내외로 구성된다. 법률 제15조에는 청년 당사자들의 참여를 위해 청조위 민간위원 중 10분의 3 이상을 청년을 두도록 하고 있다. 청조위는 2020년 9월에 처음 구성되었으며 1기 청조위가 2년간의 임무를 마무리하고 2기 청조위가 2022년 10월에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2기 청조위 역시 역할을 다하고 2024년 11월 이후에 3기 청조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청년정책의 총괄·조정기구인 청조위 외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2004년 이 법의 전신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제15조에 규정되었던 청년실업해소특별위원회에서부터 설립되어 2022년까지 운영되어 왔다. 2023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조위가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맡고 있어 폐지되었는데 법률 자체의 규정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표 1]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2024년)

총괄·조정 기구	행정체계			집행체계
	중앙행정기관	행정부서	중간지원조직	
청년정책조정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중앙청년지원센터	온통청년(전 온라인청년센터)/ 지자체 청년센터
-	기획재정부	청년정책과	-	-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중앙취업지원센터/ (한국장학재단)/(한국사학진흥재단)	취업지원센터/(교육지원청)/(대학/ 직업계고)/(대학인권센터)/(창업교육센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학)/(지자체)
-	외교부	-	(재외동포재단)/(한국국제교류재단)	(대학)/(지자체)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통일*센터)
-	법무부	-	-	-
-	국방부	-	-	(군대)
-	행정안전부	지역청년정책과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청년마을/(지자체)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청년문화정책팀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장학재단)	(대학)
-	농림축산식품부	-	-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청년미래센터/(지역자활센터)/(자살센터)

총괄·조정 기구	행정체계			집행체계
	중앙행정기관	행정부서	중간지원조직	
청년고용촉진 특별위 (2022년 폐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지방노동관서)/(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노동위원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자체 청년센터/(고용복지센터) (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대학)/(민간기업)/(훈련기관)
-	여성가족부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족센터)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보증공사)	찾아가는 청년주거상담소/(은행)
-	해양수산부	-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대학)/(민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기업인력애로센터)/ (창업보육센터)
-	국가보훈처	-	-	(제대군인지원센터)
-	병무청	-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	-

주 : 2024년 중앙행정기관(46개) 중 시행계획을 제출한 기관은 35개 기관이며 행정부서가 있는 곳은 10개로 별도의 행정부서와 추진체계가 없는 경우 표에서 제외하였고 괄호 표기는 청년 전담/소속기관이 아닌 경우임.

출처 : 김기현(2022: 47). 관계부처 합동(2024) 자료를 이용해 최신 결과로 수정

청년기본법에는 청조위에 대한 제13조 중 제7항에 청조위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있다. 2024년 현재 국무조정실에는 청년정책조정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청년정책조정실은 2관 4과 2팀으로 총 37명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다. 2관은 청년정책기획관과 청년정책협력관으로 나누어 있으며 청년정책기관은 청년정책총괄과와 청년정책조정과, 청년정책지원팀으로 구성된다. 청년정책협력관은 청년정책협력과, 청년정책 소통팀, 청년정책 관리팀으로 구성된다.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 외에 각 중앙행정기관 중 청년 행정부서를 두고 있는 곳은 총 9개에 이른다. 국 단위 조직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정책관이 설치되어 있다. 3개 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37명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다.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에 청년정책 행정부서를 두고 있던 곳은 고용노동부가 유일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처음으로 팀 단위 조직인 청년고용팀이 신설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였다. 이후 확대 개편이 이루어져 박근혜 정부 시기부터 국 단위 조직으로 운영 중이다(김기현, 2023. 4.).

과 단위 조직은 기획재정부에 청년정책과가 설치되었고 교육부에는 청년장학지원과가, 행정안전부에는 지역청년정책과, 국토교통부에는 청년주거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청년정책과 금융위원회에는 청년정책과가 설치되어 있어 6개에 이른다. 팀 단위 조직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정책과에 청년문화정책팀이, 보건복지부의 인구아동정책관에 청년정책팀이 있다. 이처럼 각 중앙행정기관에 별도의 행정조직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청년을 포함하여

아동, 청소년 등 생애전반기 정책을 관장하는 별도의 행정부처(ministry of youth)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처럼 각 부처에 청년 담당 하위부서를 두고 있지 않다. 청년정책은 대상 중심 정책으로 다양한 기능중심 부처 간에 연계와 협력이 중요한데 개별적으로 하위 전담부서를 두게 되면 독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경향이 강화될 수 있다.

정책 추진에 있어서 실무 역할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 현장에서 정책대상자인 청년을 직접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전달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 2023년에 청년기본법이 개정되어 중간지원조직과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청년정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비롯하여 전달체계 구축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주관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국무조정실에서는 민간위탁 형태로 청년 재단에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전달체계와 관련 시도 청년센터와 시군구 청년센터를 거점센터로 지정해 구축하는 방안 역시 사업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별도의 전달체계를 통해 분산된 형태로 업무가 추진 중이어서 이에 대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비교적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용이한 온라인 플랫폼 역시 고용노동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된 온통청년(<https://www.youthcenter.go.kr/>)으로 통합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각 부처별로, 개별 사업별로 독립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어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2024년 중앙행정기관의 분야별 과제와 예산을 보면, 과제 수는 일자리와 교육 분야가 각각 124개와 117개로 전체 과제 수의 67.7%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은 주거 분야가 1조 4,20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1.0%로 집중되어 있다(관계부서 합동, 2024. 9.). 반면 복지·문화 분야는 44개 과제에 1조 9,531억 원으로 예산 비중이 7.7%에 그쳤고 참여·권리 분야는 43개 과제에 888억 원으로 예산 비중이 0.3%에 머물고 있다. 분야별 과제와 예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역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추진과제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추진체계에 있어서 중간지원조직과 전달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 부처의 세부적인 정책 사업단위에서도 중간지원조직은 공공기관의 형태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의 역할을 수행 중인데 청년정책의 경우 중간지원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동시에 청년정책이 지역사회로

이어질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각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해 온 청년센터의 경우 기능과 역할이 제각각인데 200개 이상의 지자체 청년 센터를 전달체계로 전환하여 중앙과 지자체를 연결하는 정책 추진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어서 청년정책은 대상 중심 정책으로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참여와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청년 참여와 관련하여 2023년부터 각 중앙행정기관에 2030자문단이 구성되었고 이를 관할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부처의 업무 추진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배치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 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지만 부처별 참여 확대와 더불어 공통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청년참여기구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의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청년 연령 정의를 40대까지 확장하는 조례 개정이 잇달아 진행 중인데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조항에 대한 논의를 특정 부처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처럼 청년 정책 전반에 관한 공통 사안을 다루는 청년 참여기구가 필요한데 별도 구성이 어렵다면 부처별로 설치 되어 있는 2030자문단이 참여하는 원탁회의 형태를 취하거나 범위를 확장해 각 시도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포괄해 유럽연합의 청년포럼(European Youth Forum)과 같은 공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체로 중앙행정기관은 재정을, 지자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재 청년정책은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에 있어서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유사한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제 수는 2024년 현재 356개에 이르고 있는데 정책 당사자인 청년이 이 많은 정책 사업을 알기 어렵고 낮은 인지도에 이어 낮은 참여율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 논의가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이고 각각 브랜드 사업을 발굴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20). 청년의 삶 개선 방안. 국무조정실.
- 관계부처 합동(2024).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 김기현(2020).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보건복지포럼 284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54-68.
- 김기현(2022). 청년정책 전달체계 및 참여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305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54-68.

특집
02

충청남도
고립·은둔
청년 발굴과
지원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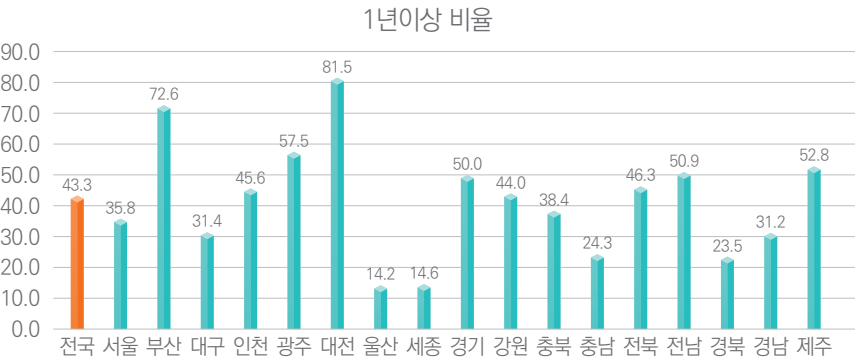
오정아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박춘섭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발달이론 측면에서 보면 청년기는 성인기 이행을 위해 취업이나 결혼과 같은 사건이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이러한 관점으로는 청년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노출된다(이정봉, 2021). 현대사회에서는 성인으로의 이행을 일련의 과업으로 설명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Creaven et al., 2021), 과업 수행이 지연될 때 무능한 성인으로 규정됨의 오류를 보인다(박은주 외, 2020). 이는 다시 청년에 대한 낙인효과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청년의 사회적 고립 수준을 고조시켜 종국에는 사회와 문을 단절하는 은둔의 상황으로 이끌게 된다.

청년의 5%가 고립·은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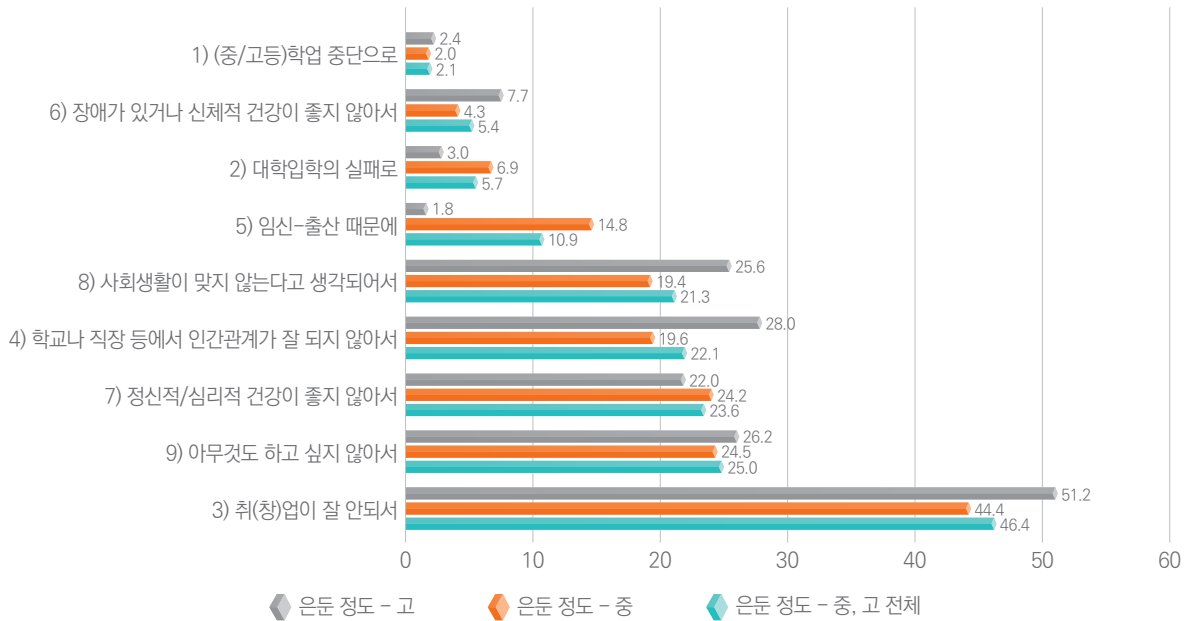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청년의 약 5%인 54만명이 고립·은둔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은둔기간이 1년 이상인 청년은 전체 43.3%이고, 그 중 충남도는 24.3%로 분석되었다. 충남의 사례만 보면, 청년의 은둔 이유로는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4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취업이 청년의 고립 은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데이터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2022
주 : 만19세~34세 미혼 은둔 청년 중 은둔 기간이 1년 이상인 청년 비율. 가중치 사용.

[그림 1] 은둔 기간 1년 이상 청년 비율

충남사회서비스원(2023)의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서도 ‘취·창업이 잘 되지 않아서’ 고립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은둔의 수준이 높을수록 ‘취·창업’의 어려움이 은둔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가 이들의 고립·은둔에 깊이 관여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림 2] 고립·은둔의 생활을 하게 된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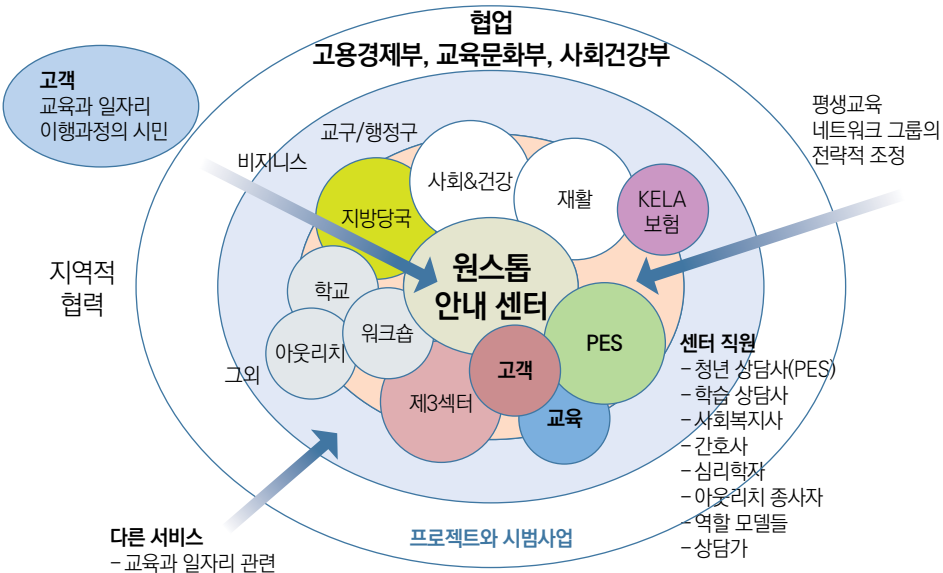
충청남도는 2023년 12월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제6조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제7조 실태조사, 제9조 지원사업 등이 명시되었고 도내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근거는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해야 할 것은,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을 위한 지원체계가 있는가?’이다.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업무는 현재 복지부서에서 진행되고 있고, 위기가구 발굴 또한 복지부서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서간 연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의②에 제시된 지역연계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모색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외국의 고립·은둔 정책은 어떠한가?

핀란드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가이드런스센터(one-stop guidance center)로 전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원스톱 가이드런스센터인 오희야모(Ohjaamo)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용서비스 제공 외에 사회복지나 교육 및 보건 서비스 등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핀란드에는 전국적으로 40개소의 오희야모가 설치되어 있으며 청년 활동가(youth worker), 사회복지사(social worker), 간호사, 상담사, 노무사, 교사 등 전문자격증을 갖춘 전문 인력들이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청년센터 오희야모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을 위해 주관부처인 교육문화부와 고용경제부, 사회건강부가 함께 고립은둔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청년정책을 위해 부처간 연계협력이 유기적으로 잘 작동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협업 기관들은 오희야모라는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하는 한편,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오정아, 2023 재인용)



자료: 김기현 외(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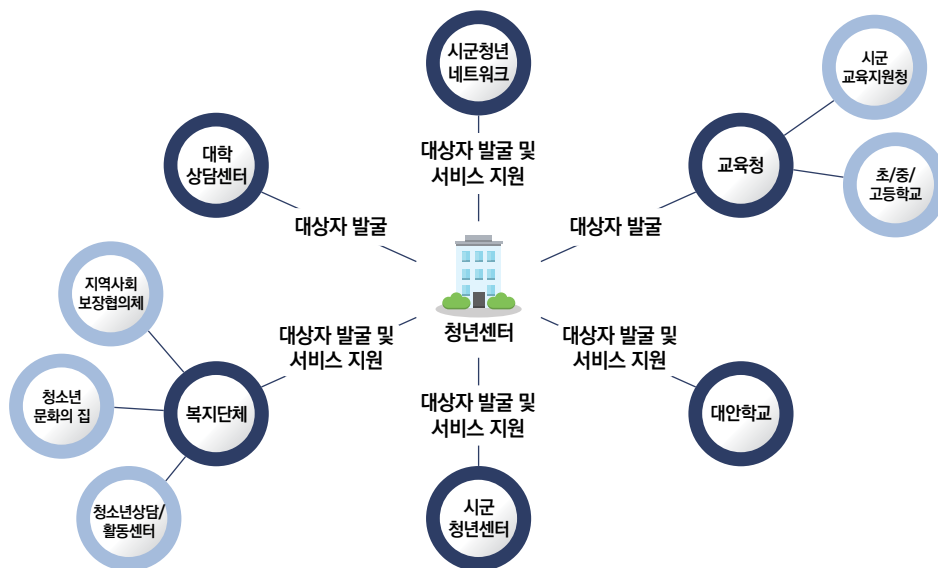
[그림 3] 핀란드 청년센터 오희야모 운영체계

우리보다 앞서 등교거부 및 히키코모리(은둔청년) 등 니트문제를 경험한 일본은 2003년 ‘청년자립·도전플랜’을 통해 청년원스톱센터를 추진하였고, 이를 발전시켜 오늘날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 이하 서포트 스테이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서포트 스테이션의 목적은 직업적 자립이다. 15~49세 청년 중 고립은둔 청년뿐만 아니라 취업포기자, 직장실패자, 니트 등 근로취약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직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적으로 자립하도록 촉진하는 데 있다.

서포트 스테이션 사업은 여러 기관의 연계체계로 추진된다. 총괄조직은 내각부내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본부(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이지만, 실무는 후생노동성과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2022 현재 전국 177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NPO기관 등 지역커뮤니티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연간 이용건수는 49만 9000건(2022년), 약 1만 2000명이 취업 및 직업훈련으로 연계되는 성과를 나타냈다. 지원은 단계별 과정으로 추진된다. 우선 면밀한 상담·면담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 결정 및 제공하고, 이후 취업 활동 지원과 정착 및 스텝업 지원(취업 후 상담) 순으로 진행된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정부는 2023년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고립·은둔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2024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정부정책에 앞서, 충남도는 2023년 고립·은둔 청년의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제는 이러한 실태를 기반으로 충남도의 고립·은둔 청년 발굴과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를 강화할 때이다.



[그림 4] 청년센터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이를 위해 먼저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위원회 조성, 여기에 민간기관의 연계 협력을 이끌어 내기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고립·은둔청년 발굴과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 청년정책과 오늘의 나

김성준

독립서점 오늘안녕 대표

지나치게 미시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돈이 없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20대 중반이었던 나에겐 중요한 문제였다. 직장이 있었지만, 다달이 나오는 월급은 전세 대출금과 카드값을 치우고 나면 간신히 식대나 남은 정도의 애매한 금액.

돈이 아쉬우면 투잡을 뛰거나 자기개발을 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대답이 돌아오곤 했지만, 굳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해? 나는 딱히 하고 싶은 것도, 목표도, 롤모델도 없는데? 그냥저냥 오늘 하루 저렴하게 놀 방법이나 찾아서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던 중,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했다.

***+ 놓치면 후회할 기회! ₩50만원 즉시 지급! 🍀몸만 오세요! 🍀+**

스팸 문자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충격! 당시 충청남도의 청년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무렇게나 현금을 쫓던 건 아니다. 원도심의 활성화와 청년 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금이었으니까.

받은 돈은 오직 문화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고, 무슨 수업도 들어야 하고, 재능 공유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등……. 귀찮은 주석이 붙어 있었지만, 50만 원은 달콤해 보였다. 문화 활동에 영화 감상도 포함되는 건가? 그렇다면 해볼 만하군! 재능 공유 모임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신청서부터 넣었다.

물렸어요? 요즘 이런 거 엄청 많아요.

나만 몰랐다. 인질로 잡힌 50만 원을 구출하기 위해 재능공유모임에 참석했다가 낯선 사람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을 기회가 또 있단다. 심지어 금액은 무려 여덟 배!

400만 원!? 나의 경악에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그렇습니다. 대신 50만 원과는 수준이 다른 대가가 필요하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 설마 악마의 계약 같은 걸까?

크크크, 400만 원을 가지고 싶은가? 그렇다면 제물을 바쳐라.

다행히 그 사람은 악마가 아니라 공무원이었다. “우리 동네의 문화나 역사를 활용하여 문화상품을 만들거나 문화적인 행사를 개최해서 문화적인 성과물을 만들어 주세요.” 그 외에도 굉장히 긴 설명이 이어졌지만, 요점은 하나다.

“공돈이 아니라는 거잖아?” 당연하지. 4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날로 줄 리가 있나. 이걸 운영비 혹은 제작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요컨대 비전이 있지만 돈이 없는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 그런 점을 고려하면 나는 이 사업에 신청할 자격이 없다.

400만 원에 대한 열망이 있을 뿐, 비전은 없었거든. 그래도 비전을 흉내 낼 순 있지. 그놈의 문화적인 문화가 뭘진 몰라도 하나 만들면 되는 거 아냐? 나는 우리 도시의 전설과 민담을 각색해서 피비린내 나는 미스터리 & 호러 스토리를 만들었고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게임 행사'를 운영하기로 했다. 게임도 문화 맞지?

1) 정확히는 TRPG라는 놀이다. 이게 무엇인지는 본문의 요지와 관련이 없으니 생략하겠다. 보드게임 체험행사 정도를 상상해 주길 바란다. 더 자세한 걸 알고 싶다면 TRPG를 검색하면 된다.

경찰이죠? 여기 세금 도둑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한 순간이다. 한 발짝만 잘못 내딛어도 진짜 도둑이 될 수 있다. 그냥 지원금이 받고 싶어서 기획한 행사라고? 오늘도 청년 지원 정책을 고심하고 계실 공무원분들께서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분통을 터트리리라.

이렇게 뻔뻔스럽게 떠드는 모습에서 짐작할 수 있겠지만, 지원금은 단 한 푼의 낭비나 눈속임 없이 운영비와 제작비로만 정직하게 사용했다. 문화 행사 하나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과 노력이 필요할 줄이야!

이 행사를 위해서 만든 스토리를 책으로 뽑았는데, 그게 350페이지나 된다. 책 만드는 건 또 얼마나 어렵던지. 하다 보니 일이 점점 커졌다. 결국 운영비가 지원금을 초과하는 바람에 자부담금까지 생겼다.

그럼에도 멈추거나 일을 줄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 아무렴! 400만 원이나 받아왔단니까? 행사가 망하면 어떻게 하냐고? 어차피 내가 감수해야 하는 건 약간의 수치심 정도다. 망해도 된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다 해보아야지! 다행히 행사는 별다른 탈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

어머니, 저는 세금 아티스트가 되었답니다.

열토당토않은 이유로 시작한 일이지만, 덕분에 몰랐던 사실을 깨달았다. 나에겐 스토리를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이 스토리로 더 많은 게임과 책을 만들고 싶어졌다. 잠깐만? 이게 혹시 그 ‘비전’이라는 건가?

“비전 있는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이 더 있습니다!” 당시 우리 동네엔 도시재생정책과 맞물려서 축제처럼 진행되는 사업이 많았다. 어? 나에겐 이제 비전이 있잖아? 다른 사업에도 참여해볼까?

그렇게 참여하다 보니 어느샌가 지원사업과 상관없이 내 돈으로 행사를 열고, 내가 하고 싶어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내가 쓰고 싶어서 책을 내게 되었다.

특히 책을 쓰는 건 정말로 즐거웠다. 내 이름이 붙은 책이 20권을 넘어서니, 회사 월급보다 책으로 버는 돈이 더 많아졌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도전의 시간인가?

2019년. 나는 천안시 청년몰에 입점한 독립서점의 사장이 되었다.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쯤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 하는 김에 허풍도 좀 치고, 자기 자랑도 덧붙여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면 나의 경험담은 ‘청년정책이 키워낸 청년 창업자’의 미담 사례로 정리될 거다.

하지만 2019년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다. 충청남도 청년정책의 ‘사용 후기’가 아직 5년 차나 남아 있다.

창업 1년 차. 시즌 2 시작.

때는 2020년. 천안시가 문화도시로 승격했다. 그 때문인지 청년정책도 변했다. 물론 나의 착각일 수도 있다. 달라진 건 어쩌면 나였을지도 모르지. 창업을 해버렸으니 이제 생계가 걸려버렸잖은가? 이유야 무엇이든 일단 좋은 변화부터 말해보자.

지원사업의 규모가 커졌다. 자잘한 문화 행사나 소소한 지원이 사라진 대신 한 번에 몇천만 원의 지원금이 걸린 큼직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잔뜩 생겼다. 1년만 늦게 창업할 걸 그랬나? 처음엔 괜한 부러움을 느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지원사업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금액이 커졌기 때문인가? 예전과 달리 지원사업에 피곤한 제약과 절차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다른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정산작업이 괴상할 정도로 복잡해졌다. 어디 은행에서 어떤 카드를 발급받아서, 무슨 사이트에 등록하고, 어떤 정보를 입력한 후, 날짜에 맞춰서 올리고 내리고, 영수증은 전부 촬영해서 따로 저장하고, 원본은 원본대로 따로 모아서 일사불란하게 딱풀로 붙이고…….

어느 시점을 지나고 나니 사업 하나를 마무리하기 위한 정산에 꼬박 한 달을 쏟아야 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따로 월급이 나왔지만, 이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자영업자다. 정산 담당자를 따로 둘 수도 없는 판국에 이런 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건 무리다.

창업 2년 차. 너희들 정말로 괜찮아?

사실 나는 괜찮았다.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회계와 총무를 담당했었거든. 정산이 복잡 해졌다고는 하지만, 품이 많이 들어서 짜증스러웠던 거지 어렵진 않았다. 여력이 조금 남아서 나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동네에 창업한 '창업 동창생'의 정산을 도와주던 중 황당한 질문을 들었다.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아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창업 2년 차니까 너도 창업 2년 차잖아! 어째서 아직도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을 몰라?

이 천진난만한 친구는 원래 예술가였고, 문화적인 문화사업을 하다가 공방을 겸해서 매장을 만든 간이 과세자다. 그리고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친구가 참가한 지원사업엔 세금 계산서 발행이 필요했다. “어? 그러면 어떻게 하지?” 당연히 나도 모른다. 이런 답 없는 친구 같으니, 담당 공무원님께 가서 삭삭 물어봐.

이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지만, 지원사업을 벗어나서라도 당황스러운 에피소드가 많았다. 재료비 계산을 잘못해서 물건을 팔 때마다 자신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장사하던 친구. 이 세상에 소득세의 존재를 잊고 살다가 야반도주를 결심한 친구(결국 빌려서 냈다).

이거 진짜 괜찮나? 지원금을 받아서 똑딱 창업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 누가 이 친구들에게 기초 세무라도 좀 가르쳐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창업 3년 차. 최후의 생존자가 되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비슷한 시기에 창업했다는 이유로 어울려 다니며 회식도 하고, 공동 마케팅도 했던 친구들이 전부 사라졌다.

잘 되어서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한 분들도 있고, 다시 새롭게 들어온 분들도 있으며, 아직도 잘 영업하고 계신 선배 창업자분도 계시니 정말로 나 한 사람만 남은 건 아니지만, 축제 분위기에 이끌려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던 친구들은 전부 탈락했다.

이 친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나 먹고살기도 바빠서 신경끄고 살다가 아는 분의 폐업 절차를 거둬게 되었다. 망한 것도 서럽건만 폐업은 공짜가 아니다. 가구 하나 버리는데도 돈이 들고, 내 돈 들여서 설치한 인테리어를 내 돈 들여서 철거해야 한다.

대출금도 까마득하게 남았는데 이제 어쩔 거야? 청년창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그렇게나 많잖아? 혹시 청년 폐업 지원은 없어? “지원사업으로 뭐든 다 되는 줄

알아?” 하긴 그렇군. 그래도 너 요리 잘하니까 다시 도전할 순 없을까? 나의 질문에 청년 요리왕이 불통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이제 창업 못해.” 청년창업 지원으로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폐업하면 그런 지원을 다시 못 받는단다.

창업 4년 차. 조금만 더 찾아보면 다 있어요.

어느 날 청년정책 연구를 위한 간담회에 청년 대표로 참석해 달라는 연락이 왔다. 마침 잘 되었군. 나 할 말 많아! 테이블에 놓인 과일을 먹으면서 위에 나열한 이야기를 떠들었다. ① 정산작업이 너무 어렵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도 줄여달라. ② 창업 이후의 생존을 위한 멘토링과 교육이 필요하다. ③ 실패한 청년을 위한 안전장치도 만들어 달라.

정리 잘했지? 이 정도 떠들면 과일값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했건만, 내 말을 듣던 공무원은 속이 탄다는 듯 억울한 표정을 짓는다. “그거 다 이미 있어요!” 정말로? 놀라서 찾아보니 정말로 있었다.

무정산 사업도 있고, 교육도 있고, 회심의 폐업지원도 있다. 그런데 나는 왜 몰랐지? 혹시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닐까? “홍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새로운 의문이 발생한다.

그런데 왜 저는 몰랐죠?

저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청년보다 게으릅니다.

정책도 있고, 홍보도 했건만 나는 몰랐다. 이유가 뭘까? 답은 간단하다. 관심이 없었던 거다. ①, ②, ③ 번호를 붙여가면서 문제점을 나열할 수 있었던 것도 열정 넘치는 공무원과 정책 연구자분들이 하도 질문을 하시니 떠올릴 수 있었던 거지.

사실이 그러하다. 무정산 사업? 나는 복잡한 정산 작업도 혼자 해낼 수 있다. 세무 교육이나 멘토링? 사업 5년 차엔 상관없는 이야기. 폐업지원? 아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

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행사를 열고, 책을 쓰고, 끝내 창업까지 해냈지만, 나는 여전히 게으르다. 내가 경험해보고 직접적인 편익을 느꼈던 정책은 열심히 찾아보고 참여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관련 없는 정책은 그게 존재한다는 사실도 모른다.

죄송한 말이지만, 이 게으름은 분명 “홍보 열심히 하고 있어요!”로는 해결되지 않을 거다.

창업 5년 차. 나는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다.

“이거 완전 거저먹기예요! 안 하면 후회할걸요?” 8년 전 어느 날, 어느 부지런한 공무원께서 나에게 했던 말이다.

아마 대수롭지 않게 던진 말이었겠지만, 저 말 덕분에 나는 50만 원을 받았고, 문화적인 문화를 만들었고, 행사를 열었고, 책을 썼고, 전시회를 개최했고, 독립서점의 주인이 되었다. 이럴 수가……. 지금 생각해보니 저 “완전 거저먹기예요!”가 나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였군.

이미 다양한 청년정책이 존재한다. 하나하나가 다 고심 끝에 만들어진 정책이고, 그 어떤 것도 성의 없게 진행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그것이 자신을 위한 정책임을 모른다. 나보다 더 비전 있는 청년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고, 나보다 더 준비된 청년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 같거든.

그렇기에 청년정책은 성공을 강요하기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돕는 ‘놀이판’이어야 한다. 정책이 ‘청년 창업가를 위한 과제’가 아니라, ‘청년을 위한 놀이터’가 되길 바란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청년이 자유롭게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다.



현 안

중권역 목표기준 달성을 위한 당진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기초지자체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
충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활용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방안



중권역 목표기준 달성을 위한 당진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최정호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 환경부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수질’을 고시하였으며, 중권역 대표지점에 대하여 달성·유지되어야 할 목표 기준을 설정하였음
- ☑ 충청남도는 2개 대권역, 12개 중권역이 해당하며, 이중 목표 기준을 미달성하고 있는 중권역은 3곳(논산천, 대호방조제, 부남방조제)임
-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수질개선을 위하여, 현재 다양한 수질개선계획이 추진중인 ‘논산천 중권역’과 호소인 ‘부남방조제 중권역’보다 우선적으로 하천에 해당하는 ‘대호방조제 중권역’을 우선관리 대상 유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중 ‘대호방조제 중권역’ 대표지점(당진천2)이 위치한 ‘당진천 유역’을 우선관리 대상 유역으로 선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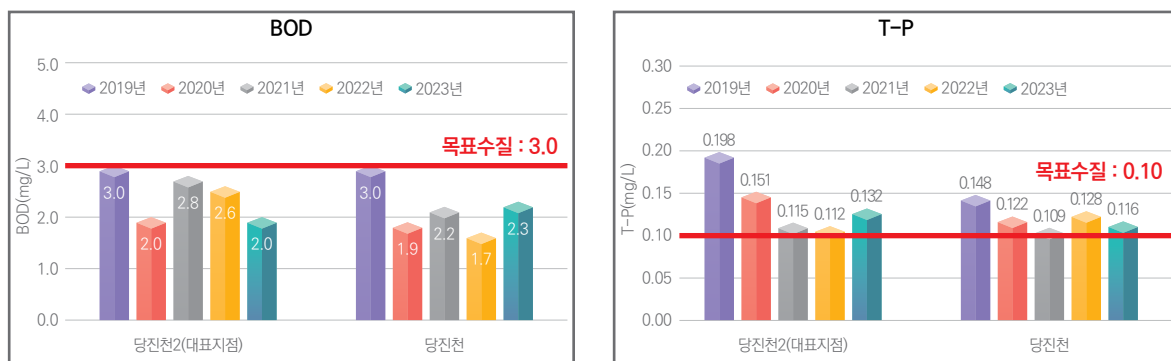


[그림 1] 충청남도 중권역 유역도



[그림 2] 대호방조제 중권역 및 당진천 유역

- ☑ 대호방조제 중권역 대표지점(당진천2)은 역천과 당진천 합류후 지점으로, '당진천2' 지점 및 '당진천'의 최근 5년간 수질조사를 조사결과, 대호방조제 중권역 대표지점인 '당진천2'에 대한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에 따른 목표기준 달성도 평가 결과 5년 연속 BOD는 달성하고 있으나, T-P는 5년 연속 초과하고 있음
- ☑ '당진천(역천합류전)' 지점에 대한 목표기준 달성도 평가 결과 '당진천2'와 동일하게 BOD는 달성하고 있으나, T-P는 초과하고 있어, 대호방조제 중권역(당진천2)의 목표기준 달성을 위해 '당진천'의 총인(T-P) 항목에 대한 수질 개선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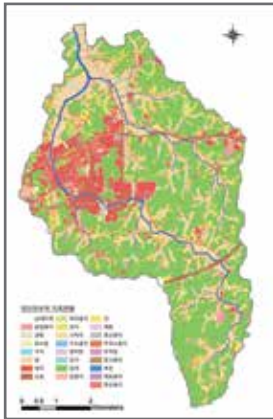


[그림 3] 평가항목별 목표수질 평가결과(당진천2, 당진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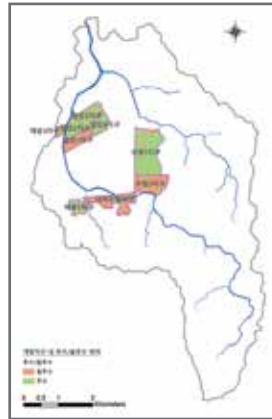
2. 당진천 오염원인 및 비점오염원 관리 필요성

2.1 불투수율

- ☑ 당진천 유역은 당진시 도시지역을 관통하는 하천으로 시가지역의 경우 대부분 불투수면(대지+도로)이며, 현재 도시개발사업 진행중으로 향후 불투수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당진천 유역에 대하여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에 따라 불투수면적 산정 결과 28.0%로 나타났으며, 현재 추진중인 도시개발사업을 반영할 경우 불투수율은 31.1%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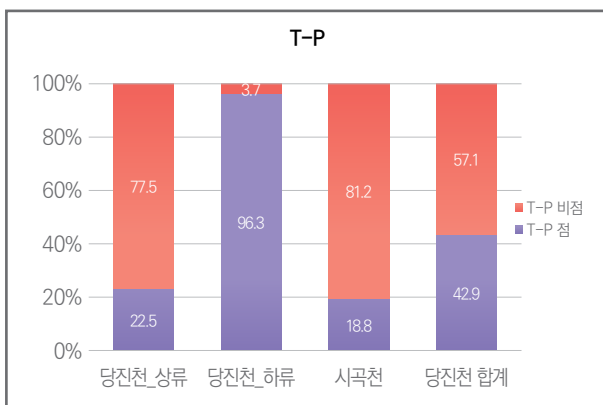
[그림 4] 당진천 유역 토지이용현황



[그림 5] 당진천 유역 도시개발사업

2.2 유달부하량

- ☑ 당진천 유역의 전체 면적에 대한 유달부하량 기준 T-P 항목에 대한 비점오염원 기여율은 57.1%로 나타났으며, 유역별로는 시곡천 유역이 81.2%, 당진천 상류 유역이 77.5%로 높게 나타났으나, 시곡천 합류후 당진천 하류 유역은 3.7%로 상대적으로 비점오염원 기여율이 낮게 나타났음
- ☑ 당진천 상류 및 시곡천 유역의 생활하수의 대부분을 당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어 점 배출부하량이 낮게 나타났음
- ☑ 소유역별로는 당진천 도심지에 위치한 당진천04 소유역이 9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대지 비율이 낮은 당진천10 소유역이 낮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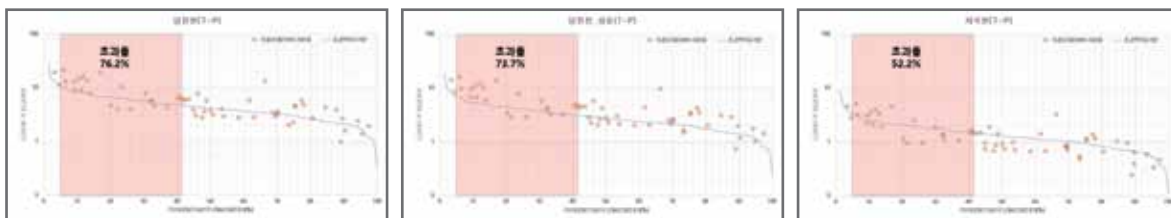
[그림 6] 하천별 비점오염 기여율



[그림 7] 소유역별 비점오염 기여율

2.3 환경기준 초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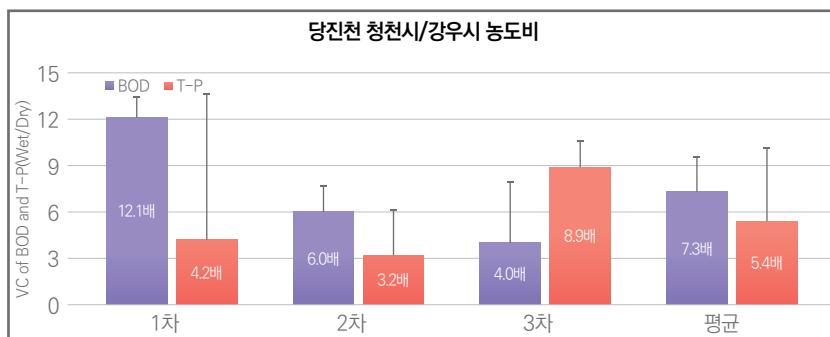
- ☑ 충청남도에서는 2011년부터 주요하천에 대하여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어, 모니터링 자료(2011년~2023년)를 활용하여 유량지속곡선(FDC, Flow Duration Curve)을 작성하였음
- ☑ 각 지점별 관리유량(5~40%) 구간에서 당진천은 76.2%, 당진천 상류 73.7%, 시곡천은 52.6%로 모두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 부하지속곡선 분석결과 당진천 전체 유역과 당진천 상류 유역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시곡천은 유사성이 낮게 나왔는데 이는 당진천의 주요 오염원인은 당진천 상류 유역임을 알 수 있음



[그림 8] 유량구간별 환경기준 초과율(BOD, T-P)

2.4 강우시 수질오염도

- ☑ 당진천지점에서 총 3회 강우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강우시 모니터링 결과 T-P(총인) 항목의 유량가중평균농도(EMC)는 0.215~0.354mg/L, 침투농도는 0.355~1.003mg/L로 나타났으며, 청천시(유출전)와 유량가중 평균농도 비교 결과 4.2~8.9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진천의 오염원인은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임을 알 수 있음



[그림 9] 청천시 대비 강우시 BOD 및 T-P 농도 증가비

3. 당진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안)

3.1 우선관리지역 선정

- ☑ 당진천 전체 유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낮은 유역 및 현재 비점오염원 관리계획이 추진중인 유역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 당진천 유역 중 우선관리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당진천 유역을 당진천 상류(시곡천 합류전), 당진천 하류(시곡천 합류후), 시곡천 유역으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초과여부, 불투수면적, 유달부하량 비점기여율, 강우시 유출특성 등을 분석하였음
- ☑ 우선관리지역 선정을 위해 앞서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당진천 하류 유역 및 시곡천 유역을 우선관리지역에서 제외하였음
 - 당진천 하류 유역은 당진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어 비점오염원 기여율 및 불투수면적을 매우 낮음으로 제외함
 - 시곡천 유역은 현재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재원의 효율성을 위하여 금회 관리지역 지정범위에서 제외함
- ☑ 당진천 상류 유역의 경우 강우 2일뒤 어류폐사(2022.05.11)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있었으며, 강우 이후 쓰레기 및 악취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임
- ☑ 또한, 당진천 상류 유역은 생활하수의 90% 이상을 당진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합류식 처리구역으로 강우시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CSOs)에 의한 영향이 큰 지역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 불투수면적을 분석결과 당진천 상류는 34.4%로 법적기준인 25%를 초과하고 있으며, 당진천 상류 유역에 추진중인 도시개발사업을 반영할 경우 불투수면적이 34.4%에서 39.2%까지 증가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함
 - 시곡천(16.8%) 및 당진천 하류(6.5%) 유역은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 당진천의 관리구간(5~40%)에서 유량구간별 환경기준 초과율은 76.2%로 당진천 상류(73.7%)와 유사하였으나, 시곡천은 52.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당진천의 비점오염원의 영향이 큰 홍·풍수기의 오염원인은 당진천 상류 유역임을 알 수 있음

- ☑ 앞서 수행한 분석 결과 및 사회적 이슈, 장래 개발계획, 민원 등을 고려할 때 당진천 유역중 당진천 하류 유역과 시곡천 유역을 제외한 당진천 본류 구간중 당진천 상류(시곡천 합류전) 유역을 관리지역으로 선정함

3.2 관리지역 지정범위

[표 1]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신청면적

중권역	하천명	유역구분	면적(k㎡)	관리지역	소유역	비고
대호방조제	당진천	당진천 상류	26.799	대상	당진천02~10	시곡천 합류전
		당진천 하류	1.443	-	당진천01	시곡천 합류후
		시곡천	12.670	-	시곡천01~07	당진천 합류전
		합계	40.912	-	-	-



[그림 10] 당진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범위(안)

3.3 관리대상 물질 및 관리목표

관리대상물질 : 총인(T-P)

- ☑ 관리대상 요청지역인 당진천 상류 유역의 불투수면적률은 34.4%이며, 현재 9건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해 불투수면적률이 약 39.2%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함
- ☑ 또한, 요청지역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전·답의 비율이 약 23.8%로 비료 사용으로 인해 농지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인(P)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음
- ☑ 당진천 수질 측정결과 BOD 항목은 목표기준(3.0mg/L) 만족하고 있으나, T-P 항목은 목표기준(0.1mg/L) 초과하고 있어 T-P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따라서, 강우유출에 의한 수질오염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촌유역 특성이 혼재된 요청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추적·관리가 가능한 총인(T-P)를 관리대상 물질로 선정하였음

관리목표지점 : 당진천 본류 원우교(시곡천 합류전) 지점

[표 2] 관리목표지점 제원

중권역	하천명	지점명	위치	비고
대호방조제	당진천	당진천 상류	당진시 원당동 396-8(원우교)	시곡천 합류전

관리목표

- 1) 중권역 목표기준 동일 : 총인(T-P) 0.100mg/L
- 2) 관리유량구간(5~40%) 초과율 : 50% 이내

목표기간 : 2026년 ~ 2035년(10년)

☑ 관리지역 지정(2024년) 및 관리계획 수립(2025년)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을 목표기간으로 설정

3.4 세부 관리방안

- ☑ 당진천 유역은 도농복합 유역으로 특성을 반영하여 관리방향을 설정하였음
- 도시지역 : 읍내동, 채운동, 우두동, 원당동, 수청동, 대덕동
 - 농촌지역 : 순성면 성북리, 순성면 갈산리, 송산면 금암리

[표 3] 당진천 유역 비점오염원 세부 관리방안

구분	도시지역	농촌지역
예방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투수면 관리(도로노면 관리) 도로정소차 운영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저영향개발(LID) 기법적용 확대 LID 사업추진 통한 불투수면 증가 억제 공공시설 그린인프라 설치 확대💡 빗물이용 활성화 방안 공공청사, 대형시설물, 주거단지에 빗물이용 시설 설치 사업 추진 산업단지 내 우수저류지 조성💡 합류식 하수관거 CSOs 관리 관로정비, 우수토실 점검·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양유실 저감형 발기반 정비 토사석채취 혹은 벌채로 훼손된 임야의 산림복구💡 친환경 비료(완효성) 비료 보급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확대💡 가축분뇨 사전예방대책 강화 가축사육시설 적정관리 유도 가축분뇨 배출 시설 합동 지도점검

구분	도시지역	농촌지역
저감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우유출수 저감시설 설치 지하저류조 설치 등 하천 직유입 방지 유수지를 활용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비점오염원 유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지역 맞춤형 비점저감시설 설치 생태동병, 생태습지 등 우회수로 조성 및 유실저감 시설 설치 가축분뇨공공처리율 제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연계처리 유도
유역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점오염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방과후 교실, 봉사활동시간 부여,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 비점저감시설 유지관리 교육 강화 친환경 경작방법 교육 및 보급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정책포럼 운영, 우수시책 공모전을 통한 시민 및 기업참여 유도 기업, 주민, 시민단체 중심으로 유역관리 리더 발굴 자율 환경감시단 운영 마을별 활동가 양성·운영, 주민협의체 지원 	
비점오염원 관리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빗물관련 조례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 유역별 통합적 관리와 물관리 및 물순환의 중·장기적 전망과 정책 추진 강우유출수 자동측정망 설치·운영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기초자료 확보 및 영향 분석 이행평가 등 연구사업 추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 후 저감사업 추진에 따른 정량적 평가 	





기초지자체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

김용현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1.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복지재단의 운영 현황

매년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증가일로에 있으며 그 역할과 기능 또한 이전의 시기보다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역 복지재단의 증가는 2010년 이후 설립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3월 기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설립된 복지재단은 44개소로 광역자치단체에 4개소(서울, 경기, 부산, 경북), 기초자치단체에 41개소가 있다(신선웅, 2024). 충남은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등 3개의 복지재단이 있다.

[표 1] 지역복지재단 설립 현황

구분		복지재단명	계
광역자치단체		서울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부산복지개발원, 경북행복재단	4
기초 자치 단체	서울	강남복지재단,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구로희망복지재단, 노원교육복지재단, 동작복지재단, 양천사랑복지재단, 용산복지재단, 광진복지재단, 마포복지재단	9
	대구	달성복지재단	1
	인천	강화군복지재단, 옹진복지재단	2
	대전	유성구행복누리재단	1
	경기	김포시복지재단, 시흥시복지재단, 평택복지재단,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남양주시복지재단	6
	강원	태백시복지재단	1
	충북	증평복지재단, 청주복지재단, 제천복지재단	3
	충남	당진시복지재단, 서산시복지재단, 천안시복지재단	3
	전남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담양군복지재단, 목포복지재단, 신안복지재단, 완도행복복지재단, 장흥군나눔복지재단	6
	경북	김천복지재단, 영덕복지재단	2
	경남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김해시복지재단, 양산시복지재단, 진주시복지재단, 창원복지재단, 사천시복지·청소년복지재단	6
계			40
합 계			44

출처 :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이란 무엇인가? 신선웅(2024)에서 수정

광역자치단체 복지재단은 사회서비스원 개소와 더불어 통합되어 그 숫자가 축소되었지만,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은 광역의 그것을 압도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재단 설립이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 세 가지이다.

1) 지방분권화와 지자체의 역할 증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분권화는 지역별 맞춤형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역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충청남도, 2015).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사회적 인프라와 재정적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일부 지자체 사회복지재단의 설립 배경이 되었다(충청남도, 2015)

2)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강화

민·관 협력의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당면과제는 ‘어떻게 다양한 주체들과 민주적이면서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충청남도, 2015). 지역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민과 관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복지재단이 그 역할을 일 정부분 담당하고 있다.

3) 기초자치단체의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역할 강화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 증가의 이유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중 복지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복지재단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지역의 복지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아산시, 2018).

상기와 같이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복지재단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충남도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복지재단 설립의 가능성과 장단점 등을 짚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의 개념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복지재단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연기관의 개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출연기관이란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각 개별법령을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선이나 장학 또는 문화에 예술 등과 같은 공익적 목적을 실행하는

기관에 설립 및 운영 자금을 제공한 기관”으로 설명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3).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에 필요한 자금(돈)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재단(財團)에 대해 알아보자. 재단(財團)은 “기증(寄贈) 및 유증(遺贈) 등과 같은 영속적인 재산을 근거로 하여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단체를 조직하여 개방성과 독립성 등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부금 구축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전문화되고 재도화된 자선을 실천하는 모험자 본 성격을 갖는 기관”으로 정의되고 있다(신선웅, 2024).

우리나라의 민법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그리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는 현실을 보았을 때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 독립적 성격을 갖는 법인으로 법률관계의 처리와 책임이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지재단이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여 다양하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법인이며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예산, 돈)을 내어 관련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통상적으로 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형태로 설립되는 기관”으로 정의될 수 있다(신성웅, 2024).

3. 기초지자체 복지재단 설립의 가능성과 장단점 분석

1) 기초지자체 복지재단 설립의 대표적인 장점

① 지역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최근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는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 기초지자체 복지재단은 주민들의 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지역 유관기관과 네트워킹 강화

복지재단은 통합적인 정보제공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들 간의 연계를 통한 정보제공으로 이용자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동일 사업영역 내에서의 민간기관 간의 네트워크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지역 내에서 다양한 기관 간의 네트워크는 아직 부족한 현실에서 이러한 역할을 복지재단이 수행함으로써 민간기관 입장에서도 상이한 사업 기관 간의 중복적인 서비스 제공 예방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지역사회 민간/민관 네트워크의 강화 역할을 주축으로 수행함으로써 복지 재단은 현 사회복지전달체계 상의 여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2) 기초지자체 복지재단 설립의 단점

① 예산의 문제

복지재단이 설립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간 운영경비와 사업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문정화 외, 2023). 대부분의 복지재단은 재단의 시설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도록 조례상에 규정하고 있다(문정화 외, 2023).

광역자치단체 복지재단의 경우 인력과 사업이 방대한 만큼 75억원에서 5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14억 원에서 18억 원 정도 되고 있다 (문정화 외, 2023). 일반적으로 기초지자체 복지재단은 매년 17억에서 20억 원 정도의 출연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광산구, 2023). 복지재단의 운영은 이렇듯 상당한 기본자산 및 연간 운영비를 투입해야 하나 투입된 예산만큼 효과가 산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기초지자체 출연 복지재단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 복지재단 설립이 규모 있는 세금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복지재단 설립은 지역사회 의견 수렴 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해야 한다. 매년 받아야 하는 시군과 의회의 감사도 재단설립 전 신중하게 고려해볼 사항이다.

② 타 사회복지 관계기관과의 기능 중복 및 옥상옥

다른 지역에서 복지재단 설립 당시와 설립 이후에도 재단설립을 통해 민간 사회복지 기관들과의 기능 및 역할중복과 그에 따른 옥상옥(屋上屋)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다. 가령, 지역에서의 민간기부문화 활성화 및 민간 자원 조성 and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지재단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복지재단의 설립은 민간 사회복지조직과의 기능과 역할중복이 우려된다.

3) 기초지자체 복지재단의 기능과 설립 가능성 분석

평택복지재단(2016)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기초지자체 복지재단의 핵심 역할은 모금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주 모금과 배분 기능이 가장 중시되고 있다. 손선옥 외(2017)도 복지재단의 지속가능성은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활동에 있다고 주장한다. 기초지자체 복지재단의 핵심 역할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금과 배분을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모금 사업 이외에도 기초지자체 복지재단의 주 사업 내용은 시설위탁운영과 연구이다. 기초지자체 출연 복지재단의 주요 기능별로 유형화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 주요 기능에 따른 기초지자체 복지재단의 유형별 분류

시설수탁운영중심	모금 및 나눔 중심	연구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평복지재단 💡 가평군복지재단 💡 서산시복지재단 💡 당진시복지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시복지재단 💡 가평군복지재단 💡 서산시복지재단 💡 당진시복지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복지재단 💡 광진복지재단 💡 창원복지재단 💡 평택복지재단 💡 화성시 복지재단

결론적으로 기초지자체 복지재단의 주요 세가지 기능 중 한 가지 기능이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복지재단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세 가지 기능 모두 어렵다면 새롭게 복지재단을 신설하기보다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같은 기존 사회복지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 광산구. 2023. 광산복지재단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 계룡시. 2022. 계룡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 김승권 외. 2012. 지역복지개발 평가센터 운영보고서
- 신성웅. 2024.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이란 무엇인가. 한국학술정보.
- 아산시. 2018. 제4기 아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 문정화 외. 2023. 고양복지재단의 필요성과 설립 방안.
- 충청남도. 2015. 충청남도 복지 재단 설립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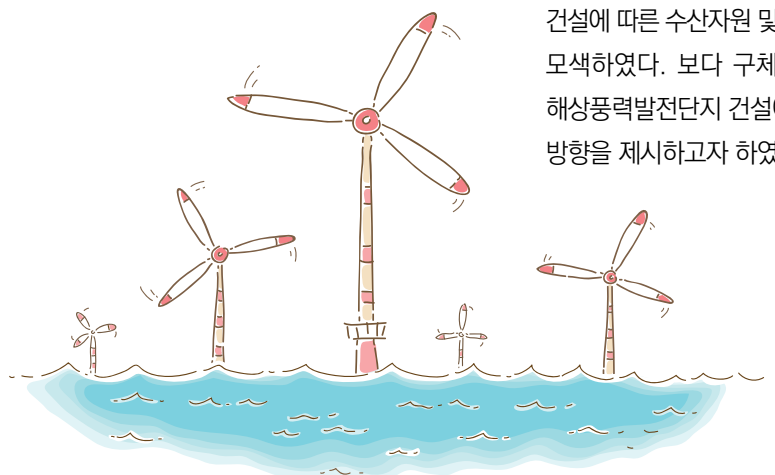
충남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활용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방안

김진영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해상풍력발전의 대두

친환경, 탄소중립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은 기존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사용에서 친환경·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관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관심 증가는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관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개발은 기존의 해양공간을 이용하는 어업과의 갈등과 충돌을 발생시킨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는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시설보호를 위해서 조성된 발전단지에 대한 통항 및 해당 지역의 조업을 제한하고자 하고, 어업인은 어업활동에 영향 지장을 받기 때문에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반대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조업량 감소, 소음 발생, 생태계 영향 등의 이유로 반대를 한다.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개발과 관련된 이러한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의 관점뿐 아니라, 합리적인 해양공간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다(강금석, 2018). 따라서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인한 어업 공간 축소 및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수산자원 및 어업인 소득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외사례 조사·분석을 통하여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지속가능한 어업소득 증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 해상풍력 동향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을 2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고(산업통상자원부, 2017), 2020년에는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하여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해상풍력발전 3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 그리고 2021년 5월에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발의하였고, 2022년 11월에는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22).

국내의 경우, 제주 탐라 발전단지, 영광 발전단지, 서남권 발전단지(전북) 등 3곳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상업 운전 중이며, 2023년 기준 124.5MW의 설비용량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전남 신안, 전북 서남권, 울산 및 동남권을 중심으로 3단계에 걸쳐 약 18.3GW 규모의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다(산업은행, 2024).

충남은 태안군과 보령시가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태안군의 경우, 발전량 1.96GW 규모의 5개 해상풍력단지의 조성을 추진 중이며, 민자 14조 9천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령시는 한국중부발전(주)과 함께 2025년까지 외연도 북측과 황도 남측 해상 62.8km² 면적에 1GW(기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약 6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보령뉴스, 2020).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을 위한 연구

세계 각국은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공존이용에 따른 잠재적 가치를 확인하고, 해양공간을 용도에 따라 구역별로 설계하는 등 공존의 효율을 높이고 발생 가능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강금석 외, 2016). 해상풍력과 양식을 결합하려는 기술적 시도는 2000년경에 독일에서 시작되었고, 2012년에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12개 국가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내 공존이용을 위한 양식 실험이 진행되었다(강금석 외, 2016). 초기에는 해조류나 홍합 양식에 관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이후에는 갑각류 및 어류 양식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양식업, 재생에너지, 관광, 해운 등 다양한 산업을 해상풍력과 결합한 다목적(Multi-Use) 해상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Buck & Langan, 2017).



[그림 1]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양식업을 결합한 다목적 활용에 대한 개념도

① 에둘리스 프로젝트(Edulis project)

벨기에서 2017년 ~ 2019년 사이에 진행된 연구로서, 기존 해상풍력발전단지를 활용한 통합 양식장 조성에 관한 연구이다. 동 연구는 해안에서 30~50km 떨어진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통합양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는데, 15개월 만에 시장성을 가진 통합을 생산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단지 내에서의 양식 가능성 확인하였다. 에둘리스 프로젝트는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해상양식 등을 고려한 다목적(Multi-Use)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생산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② 위어 앤 윈드 프로젝트(Wier & Wind Project)

해조류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북해(North Sea)의 한정된 공간의 다목적활용(multiple use of space)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서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북해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해조류 양식장을 개발하는 연구사업인 위어 앤 윈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2019년 ~ 2022년에 걸쳐서 수행이 되었으며, 북해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대규모 해조류 양식 시범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는 기존 또는 앞으로 건설될 많은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대규모의 해조류 양식이 가능함을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해에서 대규모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과 해상 공간의 다중 활용에 대한 중요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위어 앤 윈드 프로젝트는 해양공간의 단일 사용이 아닌, 다목적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공간을 양식장으로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도 태양에너지, 생태공간 조성 등의 관점에서도 접근하고 있다.



[그림 2] 위어 앤 윈드(WIER & WIND) 프로젝트의 조감도



[그림 3] 해상풍력단지의 도식 평면도

③ 윈앳씨 프로젝트(Win@Sea Project)

덴마크 오르후스대학 연구팀과 스웨덴 기반의 다국적 전력생산업체 ‘바텐팔’ 등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덴마크 발트해 크리거스 플락 해상풍력발전 단지에 홍합과 다시마 등을 양식하는 윈앳씨(Win@Se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한겨레신문, 2023). 윈앳씨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 생산과 자연 환경 사이에서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려는 것으로서,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해상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된 해역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다용도 친환경 플랫폼’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동 프로젝트는 양식뿐만 아니라 풍력발전소의 침식 방지를 위해 설치한 인공 구조물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정책 제언

① 해상풍력발전단지를 활용한 양식장 및 수산자원 조성이 필요하다.

유럽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가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그중에서도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양식장 조성에 관한 연구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해상풍력발전단지 내 종묘 방류, 인공어초 설치 등을 통한 수산자원 조성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먼저 종묘 방류를 통하여 해상풍력발전단지와 그 주변 해역의 어족 자원을 보충하고 어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인공어초 설치와 관련하여는 해상풍력발전 플랫폼과 세굴방지공 자체가 어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상풍력발전단지 내 어장기반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인공어초 설치를 통하여 수산자원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해상풍력발전 플랫폼, 세굴방지공, 인공어초 등을 통하여 조성된 새로운 공간은 어류와 해양생물에게 좋은 서식처와 산란처의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해상풍력발전단지 내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요소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하여 어업인 피해를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을 증대하여 해상풍력 건설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국내에서 개발된 종묘 방류, 바다목장, 바다숲, 인공어초 설치 등 수산자원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을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적용하여 어장 축소에 대응하여 자원회복을 통하여 어업인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② 해상풍력발전단지를 활용한 양식장 조성에 있어서 적합한 품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양식장으로 활용할 경우, 기존의 양식장과는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유럽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양식장 조성을 위해서 어떠한 품종이 적합하고, 그에 따른 설비, 기술 등 새로운 양식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③ 어업을 넘어 레저, 관광자원으로의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양식장, 어업자원 조성뿐만 아니라, 레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해외의 경우, 해상에 설치된 풍력발전단지를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해상 풍력발전단지에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을 접목하여 방문객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영국 램피온 해상풍력단지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영국 램피온 해상풍력발전단지 관광 모습

④ 지역 어민들의 참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양식장 및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지역 어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들의 참여를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수산업 공존 포럼”이라는 정책리빙랩 운영을 통하여 지역어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 및 공존을 위한 조례, 충남 해상풍력발전단지 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등의 제정을 통한 법·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이익공유의 관점에서 양식장 조성 및 운영에 지역어민의 참여를 지원하고, 보조금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 해상풍력 사업추진으로 잠식되는 어장의 회복 및 수산자원조성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제고를 위해 해상풍력발전 추진 면적의 일정 면적 또는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어장회복(어업 대책)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개방형 해상양식 단지를 조성하여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조성으로 인하여 조업 공간을 상실하게 되는 어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최은지 외 2015).

참고자료

강금석(2018)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 모델 개발

관계부처 합동(2020)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

산업은행(2024) 해상풍력발전 동향. 산은조사월보 2024년 4월(제821호)

산업통상자원부(2017)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산업통상자원부(2022)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최은지·김혜원·김장현(2015) 공존형 해상풍력단지시설을 이용한 바다목장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상품학연구 제33권 6호, 73-80

Buck, Bela H. & Richard Langan(2017) Aquaculture Perspective of Multi-Use Sites in the Open Ocean : The Untapped Potential for Marine Resources in the Anthropocene. Springer.

보령뉴스 2020년 9월 25일 “보령시, 국내 첫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 사업 선정”
<http://www.boryeo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86>

한겨레신문 2023년 3월 18일 “풍력발전소서 통합과 다시마 길러 바다숲 만들면 윈윈?
 - 덴마크 해상풍력발전소의 ‘원앤티시’ 프로젝트”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84062.html>

<https://www.sussexboattrips.com/rampion-offshore-wind-farm-voyage/>

<https://bluegent.ugent.be/edulis>

열린마당

쓰레기(일회용품) 없는 지역 축제 제안 활동

- 일회용품 사용 없는 지역축제 시민 의식조사 결과

쓰레기(일회용품) 없는 지역 축제 제안 활동

일회용품 사용 없는
지역축제
시민 의식조사 결과

권은정

천안녹색소비자연대 팀장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쓰레기가 넘치던 시기 천안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에서는 다른 NGO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을 만나 자원순환교육이나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활동을 진행할 수 없었다. 활동을 방식을 바꾸어 카페에서 발생하는 우유팩을 모아 세척하여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교환하여 주거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지구와함께가게' 활동을 2021년부터 3년간 21개 카페와 10명의 수거활동가가 함께 진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5톤 이상의 종이팩을 수거하였으며, 이는 30년생 나무 50그루를 지킨 성과로 나타났다.

3년여 활동을 하면서 종이팩이 자원이라는 인식이 조금은 높아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종이팩을 종이류에 혼합해서 배출해야하나? 아니면 종량제봉투에 버려야하나? 라는 질문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내 집 앞 분리배출 지점에 캔·비닐류·플라스틱을 배출하는 곳은 있지만 종이팩류(우유팩, 주스팩 등)를 배출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자원순환이라는 큰 틀에서 쓰레기 문제를 시민들과 풀어내기 위한 시도로 진행한 종이팩 자원순환 활동인 지구와함께가게는 환경부나 지자체의 분리배출 품목에 '종이팩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한 개인의 노력과 실천에 기대야만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2024년부터는 카페 상점 및 개인 중심의 종이팩 수거 방식에서 교육 및 홍보에 주력하는 학교와 어린이집 등 거점 확산의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거점 확산방식으로 자원순환 운동의 기조를 조정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면서 행정의 변화가 필요한 과제를 탐색 중, 천안지역의 대표 축제 행사인 흥타령 춤축제의 일회용품 발생량에 대한 궁금증으로 쓰레기 없는 축제 제안 활동을 진행하였다.

쓰레기(일회용품) 없는 지역축제 제안 사업을 기획하면서 지역의 대형 축제를 찾아보니 2023년에 시작된 K컬처 박람회와 20년 동안 진행한 흥타령 춤축제가 있다. 그 외에도 봄꽃이 피는 4월 복면 위례 벚꽃

축제부터 수확기에 열리는 수신 멜론 축제, 오이 축제, 가을철 포도 축제, 배 축제, 호도 축제, 뽕뽕데이까지 천안시는 축제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4년 천안시 예산기준 재정고시에 의거하면 2024년도 천안시 행사 축제 경비가 13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23년 122억원에 비해 17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2024년 기준 천안시와 동일 유형의 지자체의 평균 축제 경비는 114.6억원이며, 코로나 이후 축제 예산을 축소 편성하고 있으나, 천안시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축제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K컬처 박람회는 40억(시비는 25억). 흥타령 춤축제는 29억(시비 26억) 예산으로 천안시의 대표적 큰 행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다음은 우리 천안시가 2024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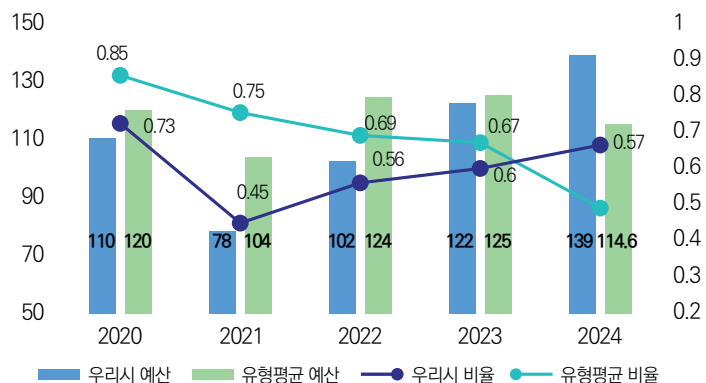
(단위: 억원, %)

세출예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 고
20,650	139	0.67%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11), 민강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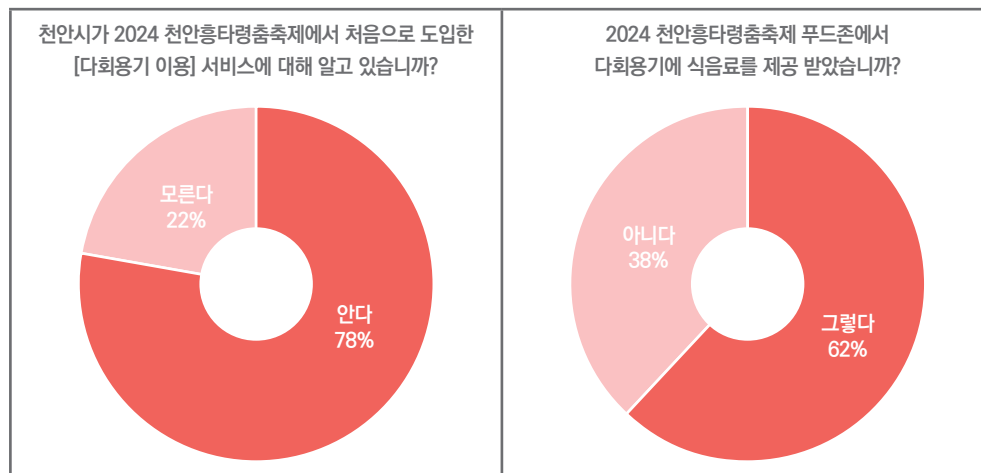
최근 5년 행사축제경비 규모 및 비율 현황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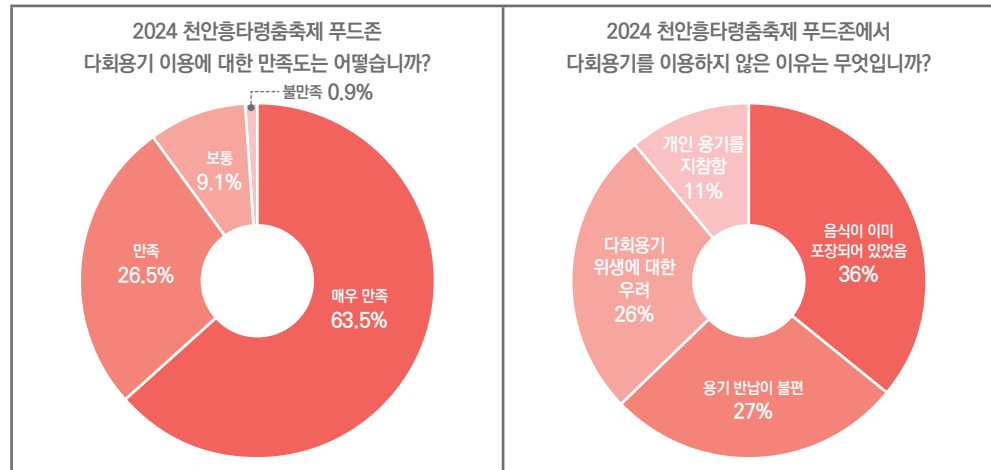


전국적으로 쓰레기 없는 축제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자체들도 1회용품 퇴출을 위해 다회용기 도입의 움직임이 있고 2023년 천안시의회도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에 녹소연에서는 천안시의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노력을 확인하고자 시민모니터단과 천안시의 대표 축제인 흥타령춤축제의 1회용품 발생량 실태조사를 축제 전체 일정 5일간 실시하였다. 또한 흥타령춤축제에 방문한 375명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없는 지역축제 시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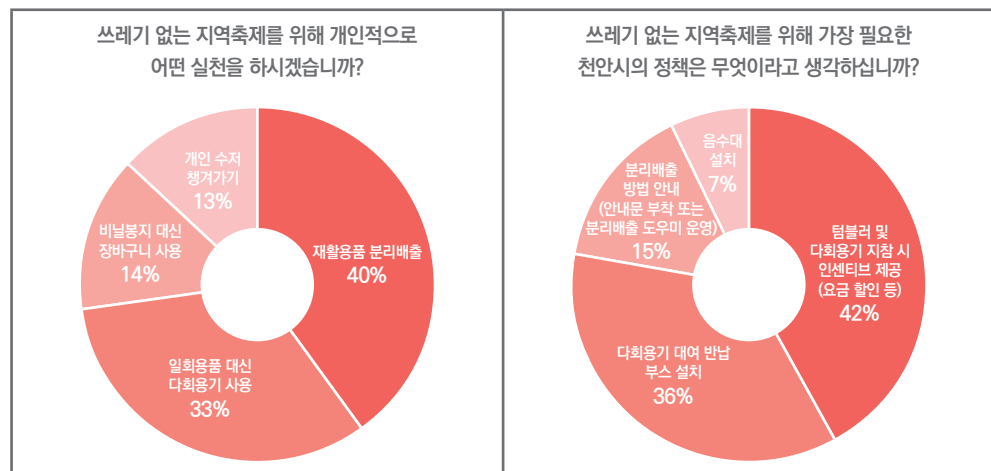
☑ 천안시가 2024 천안흥타령춤축제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다회용기 이용] 서비스에 대해 응답자 22%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축제 공식홈페이지 및 안내 책자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다회용기 도입을 통해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만들겠다는 천안시의 의지가 사전에 시민들과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24 천안흥타령춤축제 푸드존에서 다회용기에 식음료를 제공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는 62%가 그렇다, 38%는 아니다 라고 응답했다.



☑ 다회용기 이용자 중 90%는 다회용기 도입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장에서 다회용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음식이 이미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이 36%, 용기 반납이 불편하여가 27%, 다회용기 위생에 대한 우려가 26%, 개인용기 지참이 11%로 나타났다. 2024천안흥타령춤축제에서는 지역업소 10개소, 푸드트럭 10개소 등 총 20개의 푸드존이 운영되었고 천안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개 부스 모두에 다회용기를 공급하였다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다회용기를 개봉조차 하지 않거나 스티로폼 박스를 잔뜩 쌓아놓고 있는 부스도 있었다. 만두, 김밥, 순대 등은 일회용 용기에 포장된 채로 판매되고 있어서 다회용기를 선택할 수가 없었다. 더운 날씨에 현장에서 조리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 사전 포장에 대해 수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튀겨내는 파배기 등은 다회용기 제공에 대한 방해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이봉투에 담겨 판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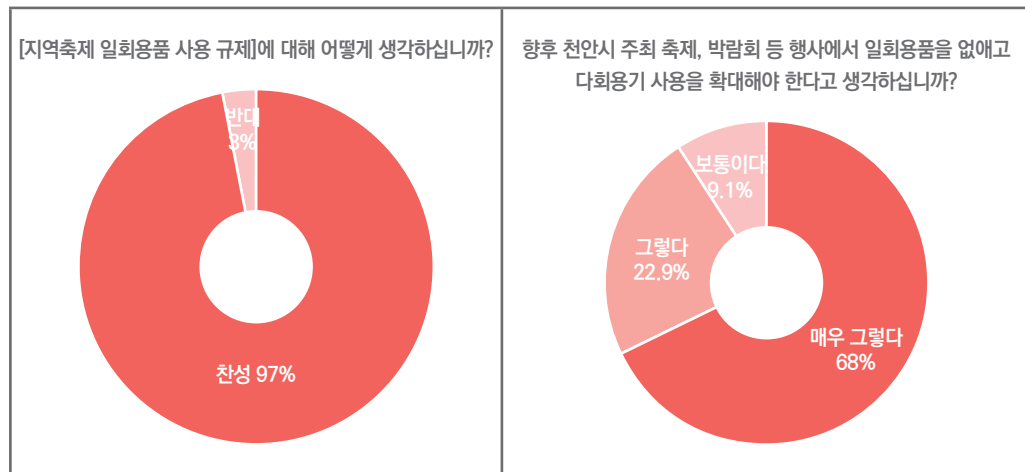


☑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천안시 정책으로는 다회용기 할인 등의 적극적인 가격 유인책이 42%로 가장 높았고, 다회용기 대여 반납 부스 설치도 36%로 나타났다.



☑ 축제 현장의 일회용품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용 규제'에 대해서는 지난 5월 k컬처박람회 인식조사 때의 89%보다도 더 높은 97%의 응답자가 찬성하여 대다수의 시민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천안시 주최 축제, 박람회 등 행사에서 일회용품을 없애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는 매우 그렇다 68%, 그렇다 22.9%로 90% 이상이 다회용기 확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녹소연에서는 축제가 진행된 5일간 음료 부스 2곳과 기타 음식 5~6개소의 일회용품 배출량을 조사하였다. 또한 푸드존 외에 중소기업 제품 홍보 판매관에서도 커피 음료를 판매하고 있어 별도로 일회용품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곳은 다회용기가 사용되지 않아 9월 28일 토요일 14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214개의 플라스틱이 배출되었다. 커피 음료를 파는 곳이 푸드트럭 1곳과 지역 업소 1곳 2곳이 있었는데, 28일 토요일 동일 시간대인 14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푸드트럭은 254잔이 다회용기로 판매되고, 일회용이 1개도 판매되지 않은 것과 달리 지역업소의 커피 음료는 186개의 다회용기, 88잔의 일회용이 판매되었다. 이는 푸드존 운영자들에게도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적절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체험부스 운영으로 축제에 참여한 시민은 '다회용기 보급으로 일회용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으니 죄책감도 덜하고 축제 현장의 넘쳐나는 쓰레기를 안 봐도 돼서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히는 등 시민들은 다회용기 도입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는 천안시 자체 만족도 조사에서도 93%의 시민이 만족했다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첫 다회용기 도입을 계기로 지난 5월 K컬처 박람회와 비교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 것은 의미있는 변화다. 천안시청 청소행정과 재활용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다회용기는 22만개, 수저 포함 29만개가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 작년 대비 폐기물 발생량은 음식물을 제외하고 31%의 감량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축제 공식 홈페이지, 축제 안내 책자, 천안시 공식 SNS 등에 '다회용기 도입' 및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파리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5차 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알지 못한 채 종료된 것은 정부의 플라스틱 감축 계획이 얼마나 소극적 인지에 대한 반증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연예인이 온다’보다 ‘쓰레기를 줄이는 축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일회용품 쓰레기 없는 축제를 만들겠다’는 천안시의 의지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유될 수 있는 행정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변화를 기대한다.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려진 다회용컵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려진 다회용접시



푸드존에서 목격된 일회용품



다회용기 반납부스의 반납통



판매부스에 포장된 채로 방치된 다회용기



다회용기라는 한글 표시가 없는 다회용컵





**언론이
바라본
충 남**

충남 방문의 해는 도약을 위한 도움닫기일뿐

충남방문의 해는 도약을 위한 도움닫기일뿐

한남희

디트뉴스24 충남본부장

- 일시적 방문객 증가 위한 단순 행사 지양해야
- 체류형·지속가능 관광자원 발굴 육성 우선해야
- 누구나 찾는 충남이 떼떽하고 가치 있는 유산

관광객으로 먹고 살아가던 마을에 코로나가 돌아 수년간 사람의 발길이 끊겼다. 마음마저 피폐해가던 어느 날 전염병 주의보 해제와 함께 관광객 한 사람이 찾아와 민박집에 숙박료 20만 원을 냈다.

민박집 주인은 세탁소로 달려가 외상값 20만 원을 갚았다. 세탁소 주인은 그 돈으로 정육점 외상값을, 정육점 주인은 맥주집 외상값을 냈다.

맥주집 주인은 다시 민박집으로 달려가 빌려 썼던 돈을 갚았다.

그 순간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관광객은 20만 원을 돌려받고 떠나 버렸다.

돈을 번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됐지만, 마을에 빛진 사람 역시 아무도 없게 됐다. ‘어느 산골 마을의 외상값’이라는 유명한 이야기다.

관광객이 한 명이 가져온 마을의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그 변화는 마을을 훌쩍 뛰어넘는 ‘순환 경제’ 자체다.

충남도가 내년에 이 변화를 시도한다.

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기회로 관광객 5,000만 명에 도전한다. 우선 내년은 4,000만 명으로 시작, 2026년에 목표 5,0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2026년 목표치 5,000만 명을 놓고 안팎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3년 만에 2023년 관광객 3,200만 명의 반 이상(56%)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는 물음표가 적지 않다. 단순 구호에 지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충남도 관련부서는 관광객 증가 추이를 볼 때 대형 이벤트와 차별화된 콘텐츠, 15개 시군의 노력을 접목하면 “달성하지 못할 목표도 아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충남 관광객은 3,200만 명으로 전년(2,647만 5,000여 명) 대비 17%(453만여 명) 늘었다. 가정이지만 이 추세대로 매년 17%씩 늘면 올해는 3,744만 명, 내년에는 4,380만 명, 2026년은 5,124만 명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수치다.

2026년 태안에서 열리는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같은 대형 이벤트도

관광객 유입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안군과 조직위는 단일 행사에만 18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

각 시군이 저마다 '수천만 관광객 유치'를 향해 벌이는 뜨거운 경쟁도 호재다.

태안은 내년을 태안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목표를 2,000만 명으로 잡았다.

앞서 보령시는 코로나가 끝나자 2022년을 보령 방문의 해로 정하고 방문객 2,400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다.

삽교호 관광지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한 당진시는 올해 상반기 관광객이 469만 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6% 증가한 것으로 올해 1,000만 명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홍성군도 지난해 남당항 방문객이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전체 관광객이 전년보다 30% 가까이 증가했다.

예산군은 충남 시군 중 바다 도움 없이도 관광객이 늘고 있는 곳 중 하나다.

소위 '백종원 효과'를 노리고 있는 예산군은 지난해 2월 전체 방문객 증가율 16.1%, 외부 방문객 증가율 21.9%로 시군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그렇다고 수치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 내실이 우선이다.

시군이 내놓는 방문객 수치는 내외부 방문객을 모두 합한 수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주요 관광지 입장객 산출치와는 다르다.

해당 시군 주민의 내수도 중요하지만, 외부 방문객이 하루라도 자고 갈 수 있게 하는 체류형 관광 확대가 관건이다.

'충남 방문의 해'는 2년간 관광객 수치로 승부를 보려 해도, 성과를 보여주기로 포장해서도 안 된다.

2년은 충남 관광의 도약을 위한 도움닫기일 뿐이다. 선부르게 뛰어오르려고 하단 거꾸로 떨어질 수 있다. 그 기간 일회성 축제에 예산을 쏟아붓기보단, 지속 가능하고 충실한 관광자원을 발굴해 키우는 데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공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언제까지나 힘세고 행복한 충남을 담보할 수 없다. 멀리서도 찾아와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충남이 후손에게도 물려줄 만한 떳떳하고 가치 있는 유산이다.



The background of the entire page is a solid yellow color. On the left side, there are several fresh strawberries with green leaves. Some are on a light-colored wooden cutting board, while others are scattered on the surface. In the center, there is a white rectangular box with a speech bubble tail pointing downwards. The text '로컬이 답이다' is written in bold orange Korean characters inside this box. Below the box, there is more Korean text in white.

로컬이 답이다

공학도에서 청년 농부가 되다!
스마트팜으로 부농의 꿈을 실현하는 영웅딸기

공학도에서 청년 농부가 되다!

스마트팜으로 부농의 꿈을 실현하는 영/웅/딸/기



김영웅 영웅딸기 대표

Q 수도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충남 부여로 귀농하여 스마트팜을 짓고 영웅딸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충남 부여로 귀농하여 영웅딸기 스마트팜을 창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A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급을 받으며 직장을 다닐 때보다 돈을 많이 벌며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연구원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농업은 국밥집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나 IT분야처럼 투자 대비 많은 수익이 있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에 매리트가 있다고 봤습니다. 보통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면 99%는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내가 하는 만큼 정직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안정적이기에 충분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원래 자동화기기 분야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쌓은 노하우로 스마트팜의 농작물의 생육환경 제어프로그램을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등 자신이 있었기에 선택하였습니다. 충남 부여에서 농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고향이고 할아버지의 농지가 있었기에 해보지 않았던 농업 분야 사업을 시작하기에 좋다고 생각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Q2 요즘 스마트팜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스마트팜 기술 도입을 통해 영웅딸기의 딸기 재배와 생산, 품질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는 있었는가?

A2 처음 시작부터 정밀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온실에서 시작하여 생산, 품질은 기존 노지 방식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동일 면적에서 질 좋은 상품을 더 많이 생산가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존 경작 방식은 감에 의존하였다면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하여 일조량, 습도, 온도 등 식물의 생육환경을 자동제어하는 등 과학적 재배로 인간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3 청년 창업자로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궁금하다.

A3 농촌은 아직 관계 사회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이 실력, 공평, 절차보다 중요한 사회이기에 그런 문화에

적응하느라 아직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이곳의 문화에 적절히 맞춰 나가며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라 텃세가 좀 덜한 편이긴 하죠. 점점 이런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4 영웅딸기의 스마트팜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철학이나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가?

A4 건강한 농산물을 통해 일상의 작은 행복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순히 딸기의 생산량과 크기를 키우기 위해 호르몬제를 사용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스마트팜을 이용해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근원적인 요소들만 최적으로 공급하여 건강하고 정직하게 딸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맛에 맞는 적절한 당도와 크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5 스마트팜에서 딸기를 재배하시면서 가장 놀랍거나 예상치 못했던 일화가 있는가? 일하면서 웃음 짓게 했던 에피소드가 궁금하다.

A5 지금 아내가 저를 소개받고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공돌이’였던 것이 좀 놀랍고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결혼은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농사로 인해 아내를 만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Q6 영웅딸기의 딸기들이 “다른 딸기보다 뛰어나다”고 느낄때는 언제인가?

A6 고객들이 냉장고에 저희 딸기 넣어놓았더니 3주 이상은 싱싱하게 유지된다고 이야기 해주실 때 뿌듯합니다. 생산, 수확, 포장 모든 단계에서 청결과 원칙을 지키다 보니 신선하게 저장성이 확보되는 것인데 이러한 노력을 고객들도 알아주실 때 내심 뿌듯하고 기쁩니다.

Q7 앞으로 딸기 외에 스마트팜으로 키워보고 싶은 농작물이 있다면 무엇인가?

A7 저는 딸기만 계속 키울 예정입니다. 하나만 잘하기도 정말 어렵기 때문에 다른 농작물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 맛있고 건강한 딸기를 모두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Q8 스마트팜 산업에서 청년 창업가들이 가지는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와 관련하여 제2의 영웅딸기를 꿈꾸는 후배 농업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8 아무래도 청년 창업가들은 기존 농업인 대비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응용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기후 변화와 다양한 시장의 니즈에 맞춰 농업경영을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약점은 기존 농업인 대비 자본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분들의 오랜 농사 경험에서 자연스레 나오는 강점들이니 인내하고 버티다 보면 결국 능력을 갖추리라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지니 목표를 분명히 하여 도전하고 노력하다 보면 잘될 것입니다.

Q9 충청남도의 청년기업인이자 농업인으로써 현재 충남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A9 농업발전을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연구하는 R&D사업 및 관련 예산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더욱 더워지고 병충해는 많아질 것인데 미리 연구하고 도전해서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Q10 앞으로 영웅딸기가 이루고자 하는 장기적인 목표나 비전은 무엇인가? 기술 발전이나 확장 계획이 있다면?

A10 단위 면적당 딸기 생산량을 더 많이 늘리고 싶습니다. 네덜란드 농가 수준만큼 생산량을 늘리고 싶은데, 한국 기후가 어렵고 품종의 차이, 소비자의 니즈가 좀 달라서 어렵지 싶습니다. 생산량이 늘면 당도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네덜란드는 당도가 떨어져도 초콜렛에 찍어 먹는다든지 그렇게 딸기를 먹는 문화가 많아서 소비자의 니즈가 충족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죠. 일단 단기적으로 현 당도를 유지하면서 m²당 딸기 15kg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농지 확장 계획은 없고, 재배 기술과 시설 보완을 통해서 당도를 유지하면서 생산량을 많이 늘리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연구원 소식

충남연구원,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안 모색
충남연구원, 2025년도 연구 아젠더 잡았다
충남·대전, 효율적 행정통합 추진 논의

충남연구원,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안 모색

10월 17일 제4차 지역정책세미나 개최...
충남형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목표 관리 방안 모색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지역인 충청남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충남의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감소 추세이지만, 축산분야는 오히려 소폭 증가하고 있어 부분별 실천 계획을 통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충남연구원은 17일 연구원에서 “농축산분야 악취유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관리방안”을 주제로 제4차 지역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를 맡은 한국농촌기술진흥원 이길재 기후변화대응 팀장은 “농축산분야는 기후변화와 기상재해에 매우 취약하지만, 탄소경제 차원으로 보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 개선과 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며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메탄·저단백 사료 공급 △한우 출하시기 단축을 통한 장내발효 및 분뇨배출 기간 단축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사료 생산 △가축분뇨 정화처리 등 충남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연구원 김종범 책임연구원은 “충남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3년 최대 배출 시점 이후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감축 노력으로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충남 축산분야는 사육두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축분뇨와 장내발효로 인해 오히려 소폭 증가하고 있어

홍성, 예산, 천안, 당진, 아산 등 온실가스 배출 상위 지역을 중심으로 악취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극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충남도는 농·축산분야 메탄 발생량 35% 감축을 목표로 전략을 마련한 만큼,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 운영·이행평가 △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사업 운영 △ICT를 접목한 충남형 스마트 축사 지원사업 추진 △축산농가 및 도축시설의 친환경 에너지(태양광 등) 전환 △지역 내 축산환경개선 거버넌스·협약체 구축 및 운영 △충남악취관리센터(가칭) 설립 등의 정책사업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충남연구원 오용준 기획경영실장(원장 대행)의 진행으로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신인철 환경조사팀장, 충남대 안희권 교수, 한국기계연구원 이기천 박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상도 박사, 충남 녹색환경지원센터 김명준 기업지원팀장, 충청남도 백령기 친환경축산팀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충남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향을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지역 내 축산농가에서 활용 가능한 악취저감기술 등의 현장 적용성, 저메탄 사료 구매 지원 및 인센티브 제도, 농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시의성 높은 정책들이 제안되었다.



충남연구원, 2025년도 연구 아젠더 잡았다

개원 30주년...
글로벌 연구기관의 위상 마련할 터

충남연구원은 2025년도 충청도정의 새로운 전환을 마련하기 위한 4대 연구 아젠더를 선정했다고 11월 21일 밝혔다.

4대 아젠더로 △성장하는 글로벌 혁신거점·생태계 구축 △미래 대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구현 △농업·농촌의 매력도 제고와 스마트화 △지역의 특성화 발전과 자치분권 확대 등이 도출되었다.

이후 연구원이 주력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아젠더별 연구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수행하고 있던 충남도 및 시·군의 수요 대응을 위한 ‘정책기여형’ 과제는 물론, 도의회 및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업으로 추진되는 ‘공동연구형’ 과제와 중장기적 미래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형’ 과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연구과제의 정책활용도 평가를 보다 체계화시키는 등 연구활동 전반에 걸친 시스템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21일 충남연구원은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2025년도 전략과제 아젠더 자문회의’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충남 관련 대선공약의 원활한 추진 △충남의 특성화를 공간적으로 분석한 산업지도 제작 △미래 30년을 내다보기 위한 ‘미래연구팀’ 신설 △중앙 정부 공모사업 및 자체 사업 평가를 통한 정책 역제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오용준 원장 직무대행은 “내년이면 연구원 개원 30주년을 맞는 만큼,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아젠더 선정에 그치지 않고 민선 8기 하반기 충남도정은 물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연구원은 오는 12월 19일 연구원에서 올해 추진되었던 43건의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연구성과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충남·대전, 효율적 행정통합 추진 논의

분리 35년 만의
행정구역 통합...
경쟁력 있는 충청의 미래 위해 머리맞대

최근 대전·충남이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경제생활권'을 추진하기로 공동 선언한 가운데, 효율적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충남연구원은 11월 25일 연구원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주제로 제5차 지역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정책분석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은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계층 △행정구역 △행정기능 등 모든 부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특성, 사회구조, 과학기술, 정책기조 등의 핵심 변수를 면밀히 분석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연구원 정균우 연구위원은 "대구경북특별시로의 개편은 기본적으로 출혈 경쟁구조를 협업과 연계 발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통합 전략"이라며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에 맞춰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내 경제, 행정, 생활 환경 등의 다양한 화합적 결함을 위해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충남연구원 오용준 원장직무대행의 진행으로 대전세종연구원 변성구 연구위원, 충북연구원 최용환 수석연구위원, 백석대학교 박종관 교수, 충남연구원 고승희 선임연구위원, 충청남도 한지훈 정책관리팀장과 정선화 행정통합TF팀장 등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시 고려해야 할 정책들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광역시·군 간 기능과 역할 분리 △인구감소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갈등 요소를 없애기 위한 주민 대통합 차원의 정책 수립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행정통합 투트랙 전략 △대구경북 통합사례로 본 문제해결형 장단점 분석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용준 원장직무대행은 "김태흠 지사는 충남지역 인구감소는 물론, 수도권 일극체제 및 국가균형발전 등의 문제를 이번 행정통합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대한민국 미래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충남연구원이 현재 행정통합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효율적 추진 방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원 발간물

충남 리포트 플러스



**서산 석유화학 첨단소재 특화
국가산업단지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김양중 |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kyj0509@cni.re.kr



충청남도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추진방안
이민정·전춘복 |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원
minyoung1006@cni.re.kr

인포그래픽



충청남도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안
충남연구원 탄소중립전략팀
김종범 책임연구원·최창규 정책기획부장
박세찬 책임연구원·황규철 연구원



**전국최초 해양쓰레기 분포지도 제작을 통한
충남의 해양쓰레기 제로화 : 한걸음 더 앞으로**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윤종주 센터장
이상우 연구원·송혜영 연구원

정책지도



**마을소멸지수를 적용한
농촌마을(행정리) 소멸 실태 및 정책과제**
윤정미 선임연구위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비 위축과
관광객 유치의 상쇄 효과**
한석호 초빙책임연구원·김보람 연구원



QR코드를 스캔하면 YouTube채널로 연결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CNI 정책연구 플랫폼 채널로 연결됩니다.

열린충남

THE CHUNGNAM INSTITUTE

충남연구원은 도민의 더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앞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풍요롭고 건강한 정신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충남도민의 모습입니다.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충남연구원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우) 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금흥동)
TEL 041-840-1114 FAX 041-840-1129 <http://www.cni.re.kr>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작은 실천”
본 인쇄물은 재활용 가능한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